

동물 진료비 원성에 대한 소고

강 종 일

대한수의사회 국가수의전문위원
충현동물종합병원 원장/수의학박사
Pet7582@daum.net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박근혜 전대통령이 탄핵되고 5월 9일 초기에 실시하는 제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반려동물인구 천만명의 표를 의식한 후보들은 동물과 관련된 공약을 내놓았다.

유기동물보호소를 확충하거나고양이 TNR 사업지원 등의 공약은 이미 지방자치제별로 실시되고 있거나 확산되고 있어 신선함이 떨어지지만, 동물학대 가해자 처벌 강화와 개도살 금지, 참여형 동물의료보험 도입과 이명박 정부가 부과했던 동물진료비부가세 10% 폐지, 공공기관 옥상에 동물놀이터 확충 등은 눈길을 끈다.

여러 공약 중에는 임상수의사들을 불편하게 하는 내용이 있다. 동물진료비가 왜 비싼지에 대한 근본 원인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유권자를 의식한 진정성 없이인기성 발언으로 '진료비가 비싸 부담이 되니 국가가동물 진료비 기준을 설정하겠다'고 한다. 여러 후보들이 제시한 내용은 그간 임상수의사가 바라던 바이지만 정부가 이를 가로 막고 있었는데도 말이다.

필자가 1989년 개원했을 당시엔 서울시수의사회에서 제시하는 진료수가표가 있어 이에 맞춰 진료비 청구 기준이 되었다. 물론 지역수의사회에도 마찬가지로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공정거래법이 강화되면서부터 유명무실해졌다. 아니 진료수가표 제정은 '담합'이라고 규정한 공정거래법을 따라야만 했다.

이후 진료비수가가 계속 문제가 되자 대구, 부산 등 지역수의사회에서 '표준진료수가제'를 실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의사단체가 진료비 담합이란 범법행위를 했다'며 과징금을 수천만원씩이나 부과하여 재정이 열악했던 지역수

의사회는 재정난을 겪기도 했었다. 이에 수의사들은악법도 지키는 성숙한 의식으로 정부에 목소리 한번 제대로 내지 못하며 표준진료수가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내막을 모르는 후보들은 대선에 맞춰 진료비 현실화를 하겠다니 씩씩할 따름이다. 물론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법은 고쳐야 마땅하나, 이처럼 상식 이하의 황당한 법은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모든 동물에서 자가진료가전면 허용된 지 22년만인 2016년 9월 13일에 입법 예고한 '반려동물 자가치료 금지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 지난 3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개·고양이에 대한 생독백신과 심장사상충감염 예방약을 수의사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처방대상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이를 행정 예고했다. 이에 수의학적 전문지식의 문외한인 대한약사회와 대한동물약국협회 등의 반발은 참으로 가관이다. 대한동물약국협회는 수의사 처방제도의 부당함을 부추길 의도로 보이는 설문조사를 하였다.

2017년 3월24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20세~59세 남녀 반려동물 보호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설문 내용 중에는동물 키우는 보호자들에게 '반려동물 자가치료 금지법'이 부당하다는 인식을 심어 주고, 수의사에게 불리한 답변을 유도하여 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법의 당위성을 왜곡하여 호도하고 있는 듯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수의학 전공자가 아닌 약사들은 전문성을 요하는 동물약품들을 모두 자기들이 취급해야 한다는 억지 주장으로 호시탐탐, 야금야금 수의권을 침탈하고 있다. 수십년동안 수의사들이 피땀 흘려 심장사상충감염 예방

의 중요성과 각종 감염성 질병 예방을 위한 접종 의 필요성에 대해 보호자 교육을 꾸준히 해 온 결과, 그나마 이만큼 성장 시켜온 반려동물 문화와 시장, 특히 수의사의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예방약의 오남용 피해와 위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무지한 편견에 의한 결정(판결)은 많은 수의사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더구나 심장사상충감염 예방약은 단순히 아무 곳에서나 판매해도 되는 약이 아님에도 말이다.

자사 이익만을 앞세워 왔던 Z사는 마치 공정거래위원회의 편파판결을 기다렸다는 듯한 처신을 하며 그간 열악한 환경에서도 심장사상충감염 예방약 시장을 키워온 수의사들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이에 반해 B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심의판결이 부당하다고 이의제기하여 현재 법정다툼을 하고 있어 수의사들은 B사에게 용기의 박수와성원을 해 주고 싶은 심정이다.

이렇듯 수의사 고유 전문 영역까지 넘보는 약사회의 행태는 매우 우려가 된다. 약사회는 머지 않아 수의학의 전문성도 없으면서 심장사상충감염 예방약과 각종 예방주사제, 더 나아가 수의사 처방에 대한 분업을 요구할 태세다. 우리는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할 때이다. 앞으로 우리 후배님들을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하게 하여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 남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선배 수의사로서 책임이 무겁다.

심장사상충감염 예방약을 포함한 구충제 투약과 각종 감염성 예방주사는 개와 고양이를 양육하는데 기본적인 보호자의 의무다. 그러나 아직도 이 기본적인 의무마저 여러 이유를 들어 이행하지 않는 보호자도 많다. 특히 심장사상충감염 예방약과 접종비가 비싸다는 이유가 가장 많은 것 같다. 우리는 앞에서 언급한 대한동물약국협회 설문결과를 참고하여이 문제를 공론화해 볼 필요가 있다.

설문자료에 의하면, 동물병원 예방접종 비용을 '부담으로 느낀다'고 응답한 보호자가 67.5%, '매우 부담된다'고 답한 보호자가 21.1%에 달해 88.6%에 이르는 다수가 비용적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양이 보호자의 31.4%, 개 보호자 28.3%는 '동물병원의 예방접종 비용 부담으로 접종을 아예 포기 혹은 중단한 적이 있다'고 답해 평균 30%의 반려동물 보호자는 동물병원 예방 접종비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현재 반려동물 보호자의 가정접종 비율은 개 40.8%, 고양이 45%로 나타났으며, 전체 응답자의 69.5%가 가정접종의 이유로 '비용절감'을 꼽았다. 가정접종의 장점을 묻는 질문에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기 때문'이 30.5%, '원하는 백신으로 예방접종을 할 수 있기 때문'이 24.7%, '동물병원 방문의 어려움'이 20.1%로 나타났다.

예방접종을 동물병원에서만 하도록 규제 하는 것에 대한 질의에는 개 보호자의 60.5%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고양이의 보호자의 54.3%도 반대 입장을 피력해 과반수 이상은 선택의 제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리고 이번 설문조사에서 동물약국에서 구입해 본 의약품은 묻는 질문(중복응답 가능)에 심장사상충감염 예방약이 66%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예방접종 백신 42%, 내외부기생충약이 41%로 뒤를 이었다"고 한다.

위 내용의 신빙성은 좀 떨어지지만, 대한동물약국협회가 설문자료에서 보여준만큼 우리 수의권 영역이 침탈당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우리는이 부분을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하고 있을 것인가?

개, 고양이가 보호자가 너무 부담되는 경제적 이유로 예방접종을 포기하거나 자가접종을 하고, 동물병원 방문의 어려움 때문에 병원을 오지 않는 보호자들에게 동물병원에 내원하는 비율을 높일우리의 대안은 없는 것일까?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예방접종비와 심장사상충감염 예방약 등 구충제와 불임수술은 전략적으로 낮게 책정하여 대중화 시키고 있는 이유를 우리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오는 7월 1일 '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우리는 각종 감염(전염)성질병예방접종비와 심장사상충감염 예방약의 수가를 좀 낮춰 동물건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일환으로 활용하자. 또 '동물진료비는 비싸...'라는 대국민 인식을 바꾸고, 이탈된 보호자들이 약국에서 동물병원으로 돌아오도록 대중화 시키는 방안을빨리 공론화 하는 것은 어떻게 필자가 평소 해 온 생각을 제시해 본다. ☺